

문서번호	기획조정담당관
보존기간	2
보고일자	2017. 8.

기 ★ 안	과 ● 장	국 장	차 장	청 장
경정 박정훈	김학산	김정호	박지우	정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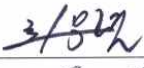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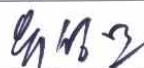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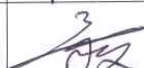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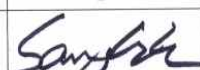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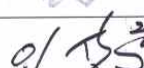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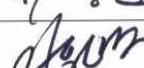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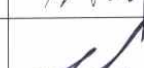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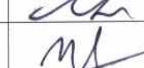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경찰

2017년 성과관리 전략계획 (2017 ~ 2021)



경 찰 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17년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 심의·의결서

일 시	'17. 8. 17~18. 10:00~15:00		장 소	경찰청 기획회의실		
의 안	2017년도 성과관리전략·시행계획(案) 및 자체평가계획(案)					
심의안건	경찰청 정부업무평가 성과관리전략·시행계획(案) 및 자체평가계획(案)의 새 정부 국정과제 등에 따른 수정 안 심의					
심의결과	안건에 대해 참석위원 (24)명 중 (14)명이 (찬성, 반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수정의결, 부결)함					
이견사항						
참 석 대상자수	30명	참석자 서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참 석 자	21명		최응렬 (위원장)		이찬희	불참
불 참 자	6명		정용기		송건섭	
			이상열		김익재	
			김근세		권영설	불참
			유성모		이은정	이은정
			차용진		조진형	
			김철균		박동균	불참
			이백수	불참	김상옥	
			이정옥	불참	윤지섭	
			이상훈		최경희	
			강원석		서찬동	
			허금탁		장다혜	
			강인선	불참	박미랑	
		강영석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경찰

2017년 성과관리 전략계획

(2017 ~ 2021)



경 찰 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목 차



I. 그간 정책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1
1. 그간의 정책성과	1
2. 향후 정책추진 방향	4
II.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	9
1. 경찰청 일반현황	9
2. 성과관리 전략계획 개요	13
III. 세부 추진계획	17
1. 전략목표 I (범사회적 협력을 바탕으로 주민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한다)	17
2. 전략목표 II (공감 받는 법집행으로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한다)	27
3. 전략목표 III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현장의 활력을 한층 제고한다)	38
【붙임】	
#. 성과목표 및 지표 현황	48

I. 그간 정책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1

그간 정책 성과

총 괄

민생안전 체감안전도 등 주요 치안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

- ✓ (체감안전도) '12년 下 59.4점 → '16년 下 69.8점으로 조사 이래('11년) 최고점 기록
- ✓ (5대 범죄 검거율) '12년 61.2% → '16년 77.0%(특히, 절도 검거율 21.8%p 향상)

- 여성·청소년 중심의 치안정책을 아동·노인·장애인까지 확장하고
- 성폭력·가정폭력 등 전통적 여성폭력 外 스토킹·데이트 폭력·사이버성폭력 등 젠더폭력 전반에 대한 대응체제를 강화할 필요

집회시위 시민의식 성숙과 함께 불법폭력시위가 꾸준히 감소

- ✓ (경력대응 집회) '12년 8,328건 → '16년 11,061건 ▶ (불법폭력) '12년 51건 → '16년 28건

- '자율과 책임'에 기반하여 집회시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 집회 금지통고 최소화, 집회현장에 경력·차벽·참수리차(살수차) 未배치 원칙
- 평온권(집회소음)·통행권(도로점거) 등 여타 기본권 간 조화 도모

교통안전 37년 만에 교통사고 사망자 4천 명대 진입, 감소세 지속

- ✓ (교통사고 사망자) '12년 5,392명 → '14년 4,762명 → '16년 4,292명

- 다만, '차량 중심' 교통문화로 후진국형 사고인 보행 중 사망사고가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사람 우선 교통문화' 정착 추진
※ 인구 10만명당 보행 중 사망('14년) : 우리나라 3.8명 / OECD 1.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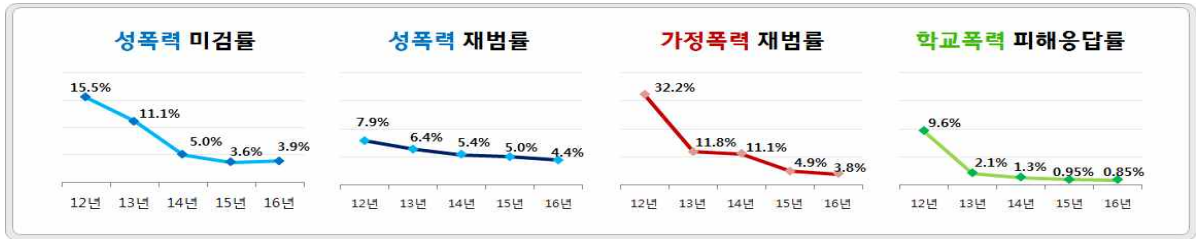
치안인프라 인력 증원·예산 증액 등 조직 외연 확대

- ✓ 인력증원 14,623명 ✓ 사이버안전국·과학수사관리관·대테러위기관리관 신설
- ✓ 경찰예산 10조원 돌파('12년 8조77억 → '17년 10조1,138억) ✓ 경기북부청 개청

- 수사권 조정·인권보호 대책 강화 등을 통해 치안서비스 품질 제고
- 점차 지능화·전문화되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치안 R&D 적극 활용, 한국형 '스마트 폴리스' 모델 개발

(1) <민생안전> 범죄와 위협으로부터 국민생활 안전 보장

- 분야별 전담경찰관에 의한 '예방·수사·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 맞춤형 보호활동으로 성·가정·학교폭력 등 사회적 약자 관련 쏠 분야 지표 개선



- '생활범죄수사팀'을 통해 생활 주변의 작은 범죄까지 세심하게 수사

- ▶ '14년 9월~'16년 동네조폭 총 38,858건 · 14,095명 검거(구속 3,719명)
- ▶ 강 · 절도 피해품 회수: '12년 17,821건 312억6천만원 → '16년 52,422건 708억4천만원

- 관할 · 기능 불문 최인접 경찰관이 출동하는 112 총력대응 체계를 구축, 긴급신고에 대한 현장 대응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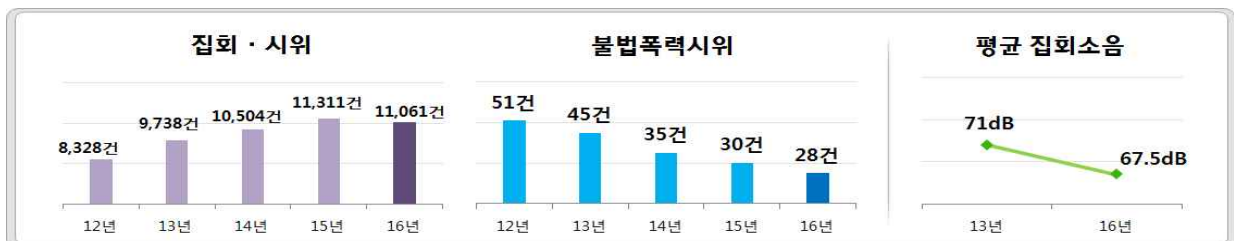
- ▶ 신고 대응코드 세분화(3→5단계) ▶ 긴급범죄 112 · 신고상담 110으로 통합
- ▶ 순찰차 태블릿 PC 보급(5,190대) ▶ 중요단어(총, 칼 등) 자동 알람기능 구축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 불법사금융 등 서민경제 침해사범 엄단

- ▶ (전화금융사기) '13~'16년 간 총 43,586건 65,034명 검거
- ※ 피해예방 홍보활동과 함께 △지연인출제 강화 △지연이체제 시행 △전화번호 이용정지 등 제도개선 병행, 발생건수는 고점 대비 23.3% 감소('14년 22,205건 → '16년 17,040건)
- ▶ (불법사금융) '13~'16년 간 총 7,762건 18,715명 검거

(2) <법질서 확립> 생활 속 질서 확립으로 국민의 불편 · 불만 감소

-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집회시위 관리로 불법폭력시위 지속 감소



- 특히, 대규모 촛불집회('16. 10. ~'17. 4.)를 인권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안정적으로 관리, 준법 집회시위문화 정착의 교두보 마련

- 교통무질서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착한운전 마일리지 · 공익신고 등 법규준수 유도 병행, 교통사고 사망자 4천명대로 감소

※ 교통사고 사망자: '12년 5,392명 → '14년 4,762명 → '16년 4,292명

- 사회신뢰를 저해하는 부패비리 · 보험사기 · 대포물건(폰 · 차 · 통장) 근절

▶ 3대 부패비리 사범(토착 · 권력, 민생, 안전) '16년 22,082명 검거(전년 대비 83.4% ↑)

▶ 보험사기 '13년 4,373명 → '16년 7,716명 ▶ 대포물건 '14년 13,612명 → '16년 43,129명 검거

- 사회 변화와 트렌드를 先 반영한 기획 · 특별단속(갑질횡포 · 3대 반칙)을 통해 사회적 이슈에 대한 국민 관심도 및 경각심 제고

▶ 갑질횡포 100일('16. 9. 1.~12. 9.) 특별단속 : 총 6,017건 · 7,663명 검거

▶ 3대 반칙(△ 생활반칙 △ 교통반칙 △ 사이버반칙) 특별단속: '17. 2.7.~5. 17. 100일간

(3) <조직 혁신> 현장 활력 제고를 통해 치안경쟁력 강화

- 경찰의 역할과 책임에 걸맞게 법령을 제 · 개정, 현장 법집행력 강화

※ △ 관공서 주취소란 · 거짓신고 처벌 강화('13년) △ 손실보상 근거 마련('14년) 등

- 성과 · 감찰 · 인사제도를 현장 친화적으로 개선, 조직 내 활력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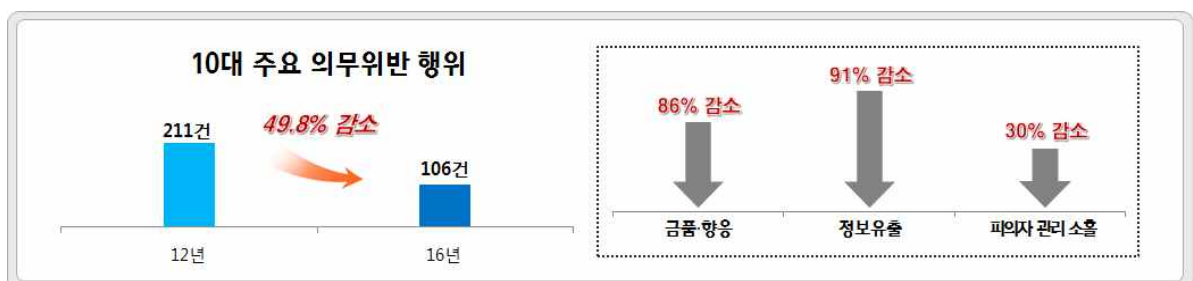
※ △ 성과평가체계 합리화 △ 야간 감찰조사 금지 △ 고충 신문고 운영 △ 특진권한 지방청 위임 등

- 교육(OJT) 혁신 · 경력채용 확대 등을 통해 현장경찰 전문성 함양

▶ △ 교육훈련 승진 반영 △ '사이버 교육포털' 운영 △ 현장순회교육 도입

▶ 경력채용('12년 10개 → '16년 19개 분야) · 전문직위('14년 103개 → '16년 398개) 활성화

- △ 부패 One Strike-out제('13년) △ 총경 이상 고위직 대상 청렴도 평가 도입('13년) △ 내부신고 활성화 등으로 직무비위 감소



(1) 대내외 정책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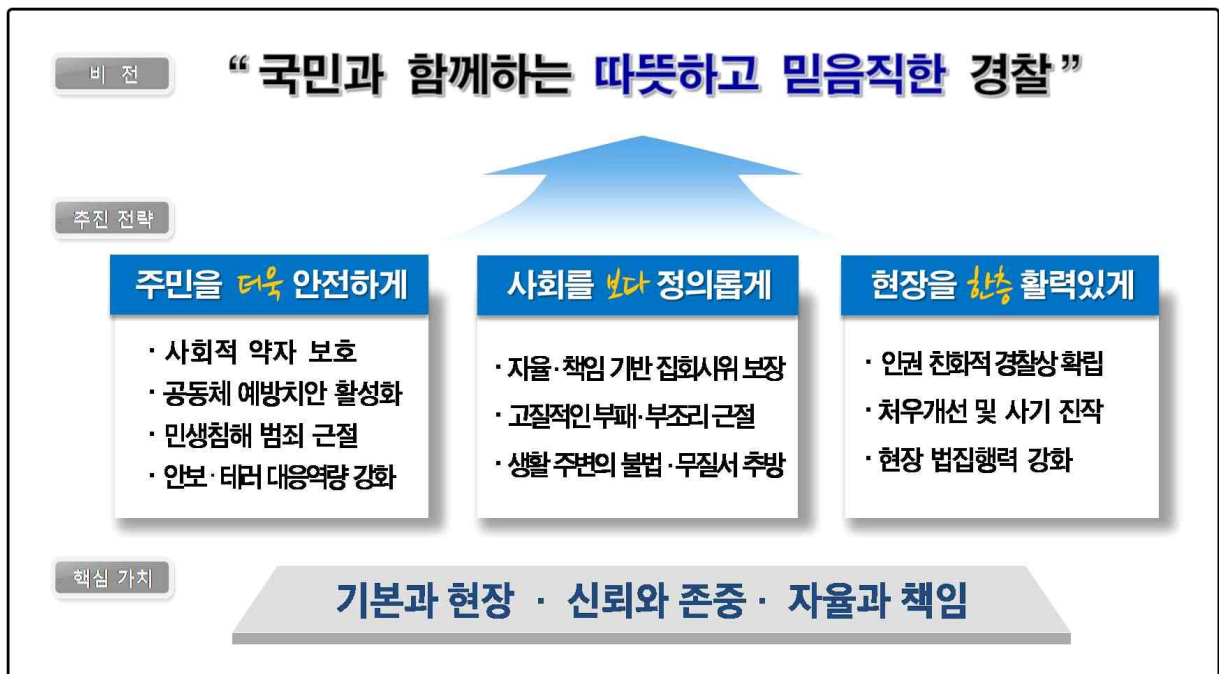
1) 대외 여건

-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방향의 불확실성은 해소되었으나, 각종 이념·이익 집단 간 갈등은 여전히 첨예하게 유지될 전망
 - 법질서에 대한 낮은 신뢰 속에 사회 정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며 경찰 법집행의 정당성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 비등
- △1人 가구 증가 △개인주의 심화 등으로 공동체의식이 약화되고 사제총기·테러위협 등 위험사회가 현실화되면서 국민 불안 가중
 -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소액절도 등 생활형 범죄가 늘어나고 현실 좌절과 소외,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분노형 범죄 증가 우려
- 인공지능(AI)·빅데이터·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은 치안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 “신호등이 하나도 없는 도시가 최초로 등장하고 도로를 달리는 차량의 10%가 운전자가 없는 자동차가 된다.”(다보스 포럼, 2025년 생활상)

2) 대내 여건

- 현장 활력 추진으로 내부만족도가 높아지고 지휘부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면서, 향후 치안정책 추진에 대한 동력 확보
 - ※ '16년 종합 직무만족도 83.2점 조사 이래 최고점(인사·성과분야 가장 큰 폭 향상)
- 정치적 변화기를 맞아 인권친화적 경찰상 확립 등 다양한 치안 의제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 내부 조직 구성원들은 △수사구조개혁 △치안인프라 확충에 대한 기대 점증

(2) 정책 비전 및 전략



- 그간 현장활력 제고로 조직에 긍정의 에너지가 축적된 만큼 이러한 동력을 국민 신뢰를 높이는 치안활동으로 연결할 필요
 - 국민의 신뢰는 경찰이 기본 책무에 충실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치안문제의 해법을 국민과 함께 꾸준히 실천해 나갈 때 가능
- 이를 위해 주민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참여와 과학적인 진단 · 분석을 바탕으로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 경찰의 법집행에 대한 대국민 수용도 제고와 사회 구성원간의 신뢰를 촉진하는 「공동체 치안*」에 치안역량을 집중
 - * 단순히 지역사회와 함께 치안문제를 해결하는 참여치안의 의미를 넘어, 경찰과 국민, 국민과 국민 사이에 '신뢰 · 규범 · 네트워크' 등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치안활동

주민 생활 주변의 평온을 확보하고, 사회 전반의 신뢰를 높이는 치안활동으로 「국민이 행복한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 구현

(3) 주요정책 추진방향

1) 공동체 치안활동을 통한 국민안전 확보

범사회적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여 생활 주변의 범죄 불안요인으로부터 주민의 삶을 안전하고 평온하게 보호

□ 사회적 약자 보호·사회갈등 조정 역할 강화

- 전통적 사회적 약자인 여성·아동·노인·장애인 및 범죄피해자·탈북자·해외이주민 등 치안사각지대 국민에 대한 우선 배려 필요
- 빈부·세대·이념 등 복합적 사회갈등사회에서 갈등조정과 타협의 절차에 적극 개입하여 신뢰와 조정의 프로세스 구축

□ 시민과 함께하는 예방치안 활성화

- 범죄예방진단팀(CPO) 등 예방 인프라를 확충하고, 시민과 지역사회가 직접 경찰활동에 참여하는 치안거버넌스 활성화
 - ※ 치안정보 공개 및 국민 참여 채널 다양화 등 ‘치안 파트너십 형성’
- ‘선택과 집중’에 따라 한정된 경찰력을 치안수요가 높은 부분에 집중 투입하고 아웃소싱·민영화 등 민관 공동치안 전개

□ 국민과 소통하는 치안활동 전개

- 일방적 정보전달식의 홍보방식에서 탈피, 국민과 함께 콘텐츠를 생산하고 쌍방향 온·오프라인 홍보 전개로 시민 신뢰도 고양
- 단순 보도자료 배포방식 보다는 새로운 플랫폼(SNS·가상현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 창의적이고 효과적으로 경찰 이미지 정립

2) 첨단 과학기술 활용을 통한 범죄 대응 역량 강화

사물인터넷(IoT)·5T 등 첨단 과학기술·기법을 치안분야 적용, 광역·홍폭화하고 있는 전통적 범죄와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

□ 첨단 과학 치안시스템 구축

- 변화하는 치안환경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치안 전 분야에 걸쳐 연구개발(R&D)을 활성화하고 첨단과학기술 활용 치안시스템 구축
 - ※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측시스템, 안면데이터 자동검색 시스템, IoT 관련 포렌식시스템, 첨단스마트워크 시스템, 지능형 CCTV 등
- 생체정보(DNA, 지문, 족흔적)를 활용한 감정기법 고도화 및 이를 위한 생체증거 확보 기술 등 법과학 기반 기술의 첨단화

□ 스마트 치안활동 전개

- 현장 법집행력을 강화하고 편의성·효율성 증대를 위한 IoT·ICT·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이 융·복합된 경찰 장비·장구의 치안활동 활용
 - ※ 드론·자율주행차량·3D프린터·38권총 대체 총기 등
- 아울러 인터넷을 통한 해킹 등 개인·비밀정보에 대한 침해 예방

□ 글로벌 과학치안 구현

-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제기준을 선도하는 한국형 치안시스템을 개발하고 해외 경찰기관과 공유
- 치안 노하우·기법 공유 등 치안한류 확산을 통해 재외국민을 보호하고 민간치안산업을 활성화 하는 등 한국 경찰의 국제 브랜드화

3) 새로운 치안수요에 대응하는 스마트 경찰 육성

지능화되고 불확실성에 심화되는 치안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분야별로 전문화되고 특화된 역량을 갖춘 스마트 경찰을 육성하고 법·제도적 기반 구축

□ 변화하는 치안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제 구축

- 사이버범죄(해킹, 바이러스, 핀테크 등)·지식재산 범죄·금융범죄 등 가까운 시일 내 등장이 예상되는 범죄에 대한 대응능력 구비
- 재해·재난·테러 등 위기상황에 개입하는 관련 기관과의 업무 조정을 통해 경찰의 역할과 임무를 재정립

□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시스템 구축

- 인구감소 추세 속에서 경찰조직 성장과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창의적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채용·보직·평가 등 인사행정 전반에 걸쳐 개개인을 인적자본 또는 지적자본으로 새롭게 인식하고 전략적 인재관리 개념 도입

□ 미래지향적 치안인프라 조성

- 경직법 개정·수사구조개혁·직급구조 개선 등 현장경찰관들의 법집행을 뒷받침하고 경찰의 위상을 재정립할 법·제도 기반 구축
- 구성원의 영예와 자긍심을 배양할 수 있는 복지기반*을 조성하고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한 유연한 조직문화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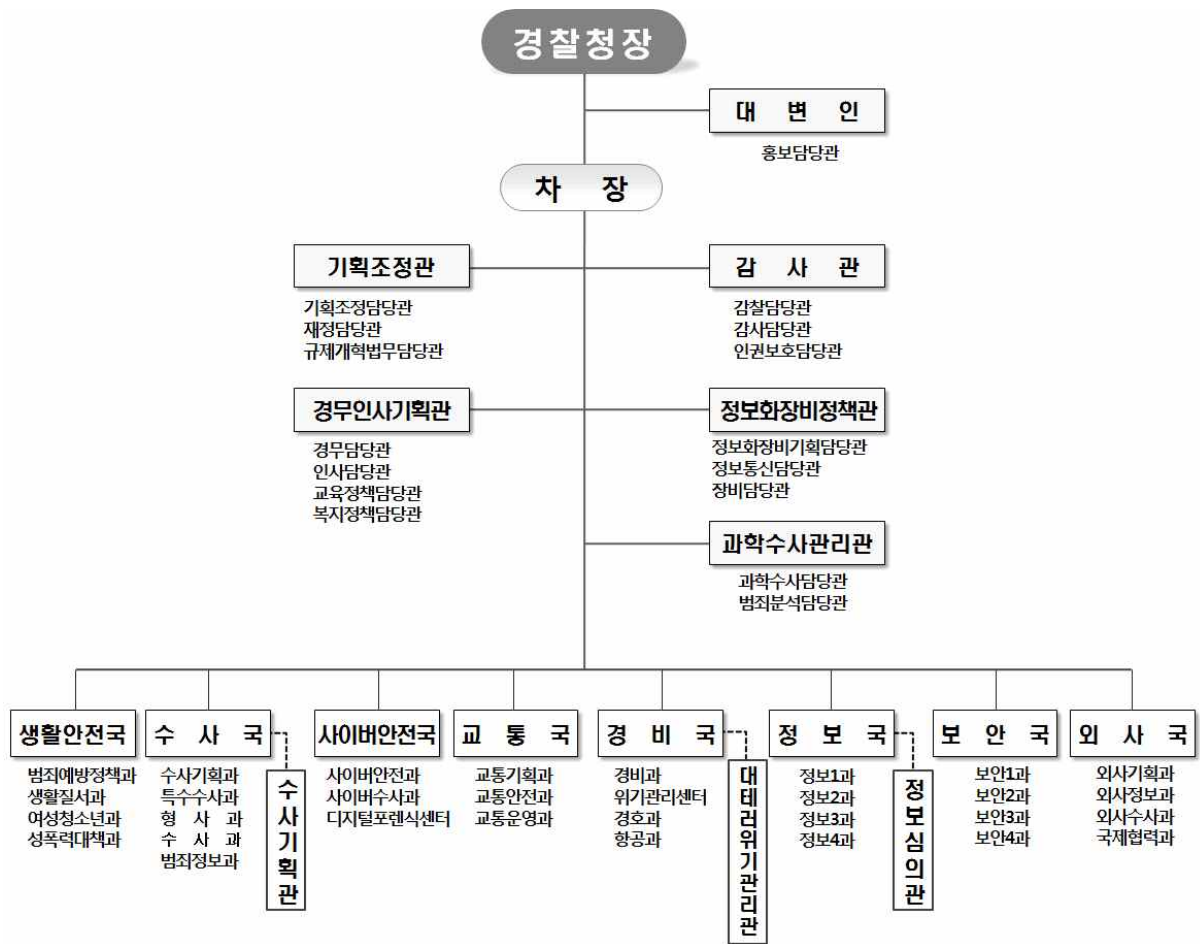
* △보수수당 현실화 △근무체계 개편 △복지시설 확충 △인사정의 실현 등

Ⅱ.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1

경찰청 일반현황

(1) 조 직



✓ 본청 : 1차장, 8국, 9관, 31과, 16담당관

✓ 부속기관 :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수사연수원, 경찰병원

✓ 지방청 17개, 경찰서 252개, 지구대 516개, 파출소 1,483개

(2) 인 원(정원 기준)

○ 총 계 : 145,751명('17. 8월 기준)

구 분	총 원	경찰관	의 경	일반직	교육공무원
정원	145,751 (100%)	115,882 (79.5%)	25,911 (17.8%)	3,940	18
				3,958(2.7%)	

※ 주무관 2,011명

○ 계 급 별(이하 경찰관)

총계	치안 총감	치안 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115,882	1	6	26	60	535	2,486	7,888	16,649	24,828	29,925	33,478
100%	0.5% (628)					2.2%	6.8%	14.4%	21.4%	25.8%	28.9%

○ 관 서 별

구 분	총 계	경찰청	부속기관	지 방 경 찰 청		
				지방청	경찰서	지역경찰
정원	115,882 (100%)	1,149 (1.0%)	483 (0.4%)	19,484 (16.8%)	46,713 (40.3%)	48,053 (41.5%)
					94,766(81.8%)	

○ 기 능 별

구분	계	경무	생활 안전	여청	수사	교통	경비	정보	보안	외사	감사	홍보	정보화 장비	지역 경찰	기타 (부속)
정원	115,882	3,239	7,209	5,735	20,115	9,762	10,820	3,381	2,487	1,471	1,617	176	1,334	48,053	483
비율	100%	2.8%	6.2%	4.9%	17.4%	8.4%	9.3%	2.9%	2.1%	1.3%	1.4%	0.2%	1.2%	41.5%	0.4%

(3) 재정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6	'17	'18	'19	'20
□ 재정사업 합계					
○ 총지출	98,092	101,138	113,033	118,784	125,090
(전년대비증가율, %)		(3.1)	(11.8)	(5.1)	(5.3)
○ 총계	98,491	101,552	113,571	119,338	125,688
(전년대비증가율, %)		(3.1)	(11.8)	(5.1)	(5.3)
□ 총지출 구분					
○ 인건비	75,943	78,048	83,512	89,358	95,613
(전년대비증가율, %)		(2.8)	(7.0)	(7.0)	(7.0)
○ 기본경비	3,986	4,087	4,209	4,336	4,466
(전년대비증가율, %)		(2.5)	(3.0)	(3.0)	(3.0)
○ 주요사업비	18,163	19,003	21,799	21,679	21,565
(전년대비증가율, %)		(4.6)	(14.7)	(△0.5)	(△0.5)
□ 예산					
○ (총)지출	98,092	101,138	113,033	118,784	125,090
(전년대비증가율, %)		(3.1)	(11.8)	(5.1)	(5.3)
○ 총계	98,491	101,552	113,571	119,338	125,688
(전년대비증가율, %)		(3.1)	(11.8)	(5.1)	(5.3)
【일반회계】					
· (총)지출	96,874	100,405	112,217	117,944	124,202
(전년대비증가율, %)		(3.6)	(11.8)	(5.1)	(5.3)
· 총계	97,232	100,781	112,716	118,457	124,758
(전년대비증가율, %)		(3.6)	(11.8)	(5.1)	(5.3)

구 분	'16	'17	'18	'19	'20
【책특회계】					
· (총)지출	668	694	775	797	842
(전년대비증가율, %)		(3.9)	(11.7)	(2.9)	(5.6)
· 총계	708	732	815	838	884
(전년대비증가율, %)		(3.4)	(11.2)	(2.9)	(5.5)
【광특회계】					
· (총)지출	55	38	41	43	46
(전년대비증가율, %)		(△29.9)	(5.9)	(5.9)	(6.0)
· 총계	55	38	41	43	46
(전년대비증가율, %)		(△29.9)	(5.9)	(5.9)	(6.0)
【혁특회계】					
· (총)지출	496	-	-	-	-
(전년대비증가율, %)		(△100.0)	-	-	-
· 총계	496	-	-	-	-
(전년대비증가율, %)		(△100.0)	-	-	-
□ 기금					
○ (총)지출	2,647	3,020	3,290	3,368	3,446
(전년대비증가율, %)		(14.1)	(8.9)	(2.3)	(1.5)
○ 총계	2,647	3,020	3,290	3,368	3,446
(전년대비증가율, %)		(14.1)	(8.9)	(2.3)	(1.5)
【국유재산관리기금】					
· (총)지출	2,647	3,020	3,290	3,368	3,446
(전년대비증가율, %)		(14.1)	(8.9)	(2.3)	(1.5)
· 총계	2,647	3,020	3,290	3,368	3,446
(전년대비증가율, %)		(14.1)	(8.9)	(2.3)	(1.5)

(1) 전략계획의 주요 특성

1) 국정과제 등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한 목표 선정

- △ 100대 국정과제 △ 일자리창출 과제 △ 대통령 지시 △ 경찰청 미래비전 △ 주요 업무계획 등을 고려한 전략적 목표 수립
- 경찰 기본업무에 충실하고 현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성과 목표를 설계, 궁극적으로 국민안전 확보·만족도 제고에 중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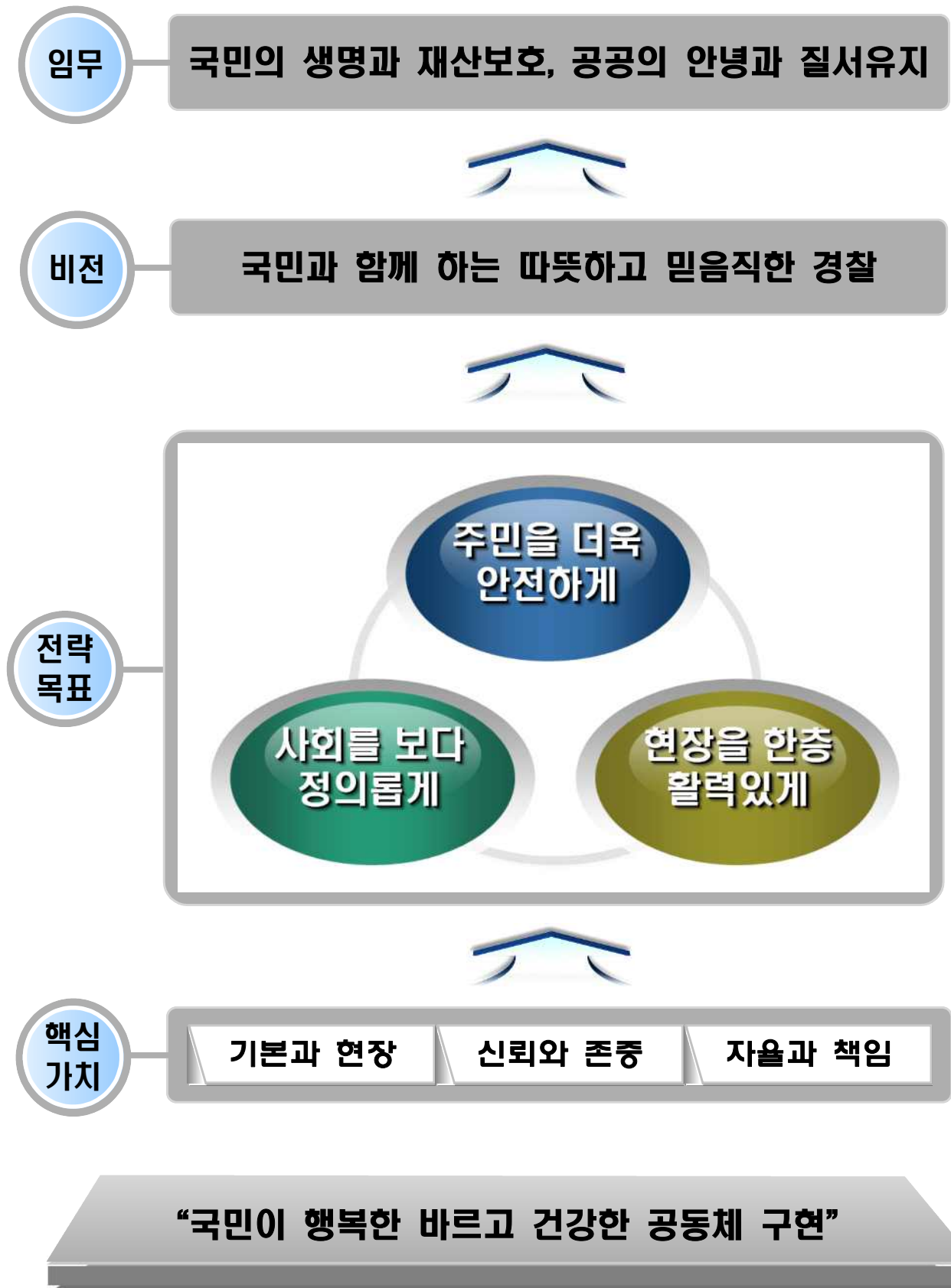
2) 과제별 이행상황 점검 및 환류체계 강화

- ‘자체평가위원회’와 ‘평가지원팀(성과관리계)’를 통해 과제 이행상황 점검 강화, 부진과제 독려 등 계획에 따른 업무추진 점검
- 정책수립 과정에서 기능별·지방청별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의 애로 및 정책 대안들을 반영, 업무추진의 공감대·동력 확보

3) ‘국민 행복’의 기본이 되는 ‘안전 확보’에 역량 집중

- ‘국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
- 미래 치안환경 변화에 맞는 중장기 청사진을 제시, ‘국민안전 확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여 체계화

(2) 전략계획의 목표체계



임무

법령상 경찰의 임무(경찰법 제3조)

제3조(국가경찰의 임무) 국가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

비전

국민과 함께 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경찰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치안활동으로 따뜻하고 믿음직한 경찰상 구현

전략목표

임무·비전 달성을 위한 핵심 3대 전략목표 선정

① 국민안전 확보 ② 사회정의 구현 ③ 현장활력 제고

핵심가치

기본과 현장·신뢰와 존중·자율과 책임

기본과 현장 : 경찰 기본업무 중심·일선현장 중심의 치안활동 전개

신뢰와 존중 : 국민에게 믿음을 주고, 신뢰로 보답 받는 경찰활동 구현

자율과 책임 : 현장에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부여

슬로건

“국민이 행복한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 구현”

주민 생활 주변의 평온을 확보하고, 사회 전반의 신뢰를 높이는 치안 활동으로 「국민이 행복한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 구현」을 경찰이 선도

《임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진압하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한다.

《비전》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경찰

〈전략목표 Ⅰ〉

범사회적 협력을 바탕으로 주민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한다.

성과목표 1

사회적 약자 보호체계의 내실화로 범죄피해를 최소화한다.

성과목표 2

공동체치안 활성화로 주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한다.

성과목표 3

국제·사이버 범죄에 공동으로 대처하여 변화하는 치안환경에 적극 대응한다.

성과목표 4

안보·테러 대응역량 강화로 확고한 사회안정을 유지한다.

〈전략목표 Ⅱ〉

공감 받는 법집행으로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한다.

성과목표 1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집회를 보장하여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를 확산한다.

성과목표 2

구조적 부패·부조리를 엄단하여 깨끗한 사회를 구현한다.

성과목표 3

수사 환경을 개선하여 일선 현장의 수사역량을 강화한다.

성과목표 4

생활 주변의 불법·무질서 척결로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한다.

〈전략목표 Ⅲ〉

인권 친화적 경찰을 구현하고 현장의 활력을 한층 제고한다.

성과목표 1

인권수호 경찰상 확립으로 대국민 신뢰를 증진한다.

성과목표 2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으로 활력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한다.

성과목표 3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치안을 통해 현장대응력을 강화한다.

성과목표 4

현장 중심의 정책을 개발·지원하여 치안역량을 강화한다.

Ⅲ. 세부추진 계획

전략목표 I 범사회적 협력을 바탕으로 주민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한다.

기 본 방 향

- ◇ 경찰 본연의 책무인 국민안전에 초점을 맞추어 생활 주변의 위협요소 제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치안 확보 필요
 - 사회적 약자 대상 주요범죄 예방활동으로 국민 체감안전도 향상 노력 경주
 - 공동체치안 활성화로 민생침해 범죄를 근절하여 서민생활을 보호
- ◇ 변화하는 치안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사이버테러 등으로부터 사회 안정 유지
 - 모바일 인터넷 시대의 도래 등 치안환경이 급변, 전략적 대응
 - 안보·테러 대응역량 강화를 통한 국가안보 위협요소 척결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

성과목표 / 성과지표(산식)		실적 및 목표치					
		'16	'17	'18	'19	'20	'21
I -1. 사회적 약자 보호체계의 내실화로 범죄피해를 최소화한다.							
▶ 성폭력 안전도	※ 행정안전부 주관 매달 국민 2,000명 전화 설문조사, 매우안전~매우불안전(5점~1점) 중 안전(4점) 이상을 선택한 응답자를 100명당 비율로 환산한 점수 반영	27.1	26.6	27.9	29.3	30.8	32.3
▶ 가정폭력 안전도		51.6	55.8	56.8	57.8	58.8	58.8
▶ 학교폭력 안전도	예) 27.1점 : 100명당 27.1명이 안전·매우안전으로 응답	24.0	24.0	24.5	25.5	26	26
I -2. 공동체치안 활성화로 주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한다.							
▶ 5대 범죄 검거율(5대범죄 발생건수 / 검거건수)	※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사범 검거율(최근 3년 평균 71.80)	77	78.9	79.8	82.9	84.5	86.5
I -3. 국제·사이버 범죄에 공동으로 대처하여 변화 하는 치안환경에 적극 대응한다.							
▶ 국제공조 기반조성 지수(경찰주재관, UN 및 인터폴협력관 등 해외 파견 경찰관 인원 수)	※ 국제치안협력을 위해 주재관·UN·인터폴 등 파견 경찰관 수(최근 3년 평균 123명)	신규	135	139	143	147	151
I -4. 안보·테러 대응역량 강화로 확고한 사회안정을 유지한다.							
▶ 유관기관 합동 위기대응 체계 구축도(협력관계 카테고리 선정, 등급별 점수 합산)	※ 협력관계 추진 주제별 등급 : 경찰청장 A·지방청장 B·경찰서장 C	60.2	66.2	73.5	81.6	90.1	100
▶ 테러 안전도(테러대응역량 강화 점수와 특수시책 가점)	※ 테러대응역량평가 : 112타격대 역량평가대회 실시(△이론시험 △사격평가 △체력측정 △불시 FTX 전술훈련 △구급법 △공용화기 등 장비 조작 등)	신규	90	91	92	93	94

(1) 주요 내용 및 추진계획

- (성폭력) 장애인시설 등 취약장소 점검, 학기 初 학교 성폭력 예방 활동 등 문제해결 중심 예방활동 및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재범 억제
 - 성폭력 피해자 수사지원의 전문성 제고 및 시기·장소별 성범죄 유형 분석을 통한 맞춤형 기획수사 등 적극적 수사활동 전개
 - ※ △해바라기센터 확대 △아동·장애인 조사기법 체계적 교육 △피해조사 참여 외부전문가(진술분석전문가, 속기사) 운영체계 정비 및 전문성 제고
- (학교폭력) 시기·대상·유형별 맞춤형 예방활동 및 학교전담 경찰관 제도 운영 내실화(자격증 소지자 배치 등)를 통해 학교폭력에 선제적 대응
 - ‘학교 밖 청소년’ 발굴·지원을 통한 범죄노출 예방 및 선도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등 고위험군 선도 강화로 소년범 재범 방지
 - ※ △가출전력 청소년 관리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 △유관기관 대상 정보 수집 등 가출팜·폭력서클 발굴·해체
- (가정폭력·학대) 예방·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학대예방 경찰관 역량 강화 및 관련예산 확보·시스템 마련 등 전담체계 내실화
 - ※ 기존 ‘가정보호’ 위주에서 벗어나 ‘피해자 보호’ 중심의 특례법 개정 추진 등
 - 아동학대 관련 부처 합동점검 및 가정폭력 유관기관·단체와의 협업 네트워크 구축 등 협력치안 강화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 ※ △미취학·장기결석아동 상시점검 △시설 내 학대 점검 상시화 △신고의무자 대상 교육 연중 실시 △학대우려아동 정기모니터링 등
 -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 및 현장의 업무 전문성 확보

(2)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 (성폭력) 최근 5년 성폭력 범죄는 연평균 6.0% 증가*하는 가운데 범죄 특성상 인지 · 신고되지 않은 피해도 많을 것으로 예상**

* 성폭력 발생건수 : '12년 22,933건 → '16년 28,993건(+6,060, 26% ↑)

** 강간 피해時 경찰 도움요청 6.6% (2013년 성폭력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학교폭력) 시기 · 대상별 맞춤형 대응으로 학교폭력은 안정화 추세이나, 정서적 폭력의 비율이 높은 실정으로 사회적 불안감 해소 필요

※ 학교폭력 중 정서적 폭력 비율 72.6%('16년 하반기 실태조사, 교육부)

-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운영 내실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지속 제기

※ △경력채용자 배치 등 전문인력 확보 △SPO 업무지원시스템 개선 등

- 학교·가정 밖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은 사회적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어 범죄환경에 쉽게 노출되고, 범죄연령도 낮아지는 경향

※ 학교 밖 청소년 : 38만7천명('15년 추산) / 가정 밖 청소년 : 23만4천명('16년 추산)

※ 학교폭력이 안정화 추세인 만큼, 제도권 밖에 있는 '학교 · 가정 밖 청소년' 등 위기 청소년 보호 ·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 순회 필요성 제기

- (가정폭력 · 학대) 가정폭력 엄정대응을 통한 검거 증가 · 재범률 감축 등 외형적 성과에 걸맞춰 내실 있는 정책 운영의 필요성 대두

※ 검거건수('15년 40,822건→'16년 45,614건) 재범률('15년 4.9%→'16년 3.8%)

- '현장 법집행력 강화' 및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임시조치 위반시 처벌 강화하는 내용의 「가정폭력특례법」 개정안 의원발의('17.7.14)

※ 現 임시조치 위반시 과태료 처분에 불과, 피해자 보호 한계 → 현행법 체포 가능한 징역 · 벌금형으로 강화 필요성 지속 제기

- △가정폭력 피해자 연령·피해정도 등 △범행시 가해자 정신상태 △유형별 피해실태 등 관련 통계 분석 다양화를 통한 대책 마련 필요

※ '16년도 국정감사(소병훈 의원) 및 기타 여야의원 요구사항 반영·개선

-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쏠 국가적 관심이 집중되며, 아동학대 근절 대책 및 향후 노인학대 등 신규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 요구

* △ 인천연수 11살 소녀 △부천원미 아들 살해 △여주 보육원 학대 사건 등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함께,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도 증가, 피해 직후 경찰의 피해자보호 활동 강화에 대한 요구 고조

(3) 참고자료

- 성폭력 근절 업무 매뉴얼(경찰청)
- 학교전담경찰관 업무 매뉴얼 (경찰청)
- 학대예방경찰관 업무 매뉴얼 (경찰청)

(1) 주요 내용 및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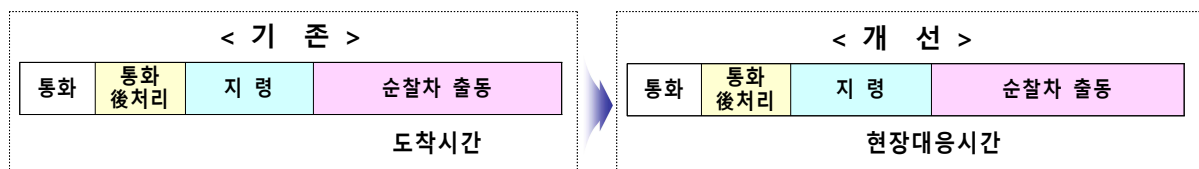
- (공동체 중심 예방치안) 범죄예방진단팀을 중심으로 범죄취약환경을 진단·분석, 지역사회와 함께 CPTED사업 등 안전한 환경 조성

※ 경찰·지자체·주민대표로 구성된 범죄예방협의체 주기적 개최, 국토부·지자체 등 CPTED 사업 선정시 경찰의견 반영절차 추가 등

- 지역주민이 원하는 장소·시간을 수렴하여 순찰하는 ‘주민밀착형 탄력순찰제’ 추진, 지역사회의 치안참여 및 체감안전 제고

- (112신고 현장대응력 제고) 긴급신고 현장대응시간 목표관리제 추진, 국민안전의 골든타임 확보

※ 112신고 접수(지방청) - 지령(경찰서) - 현장출동(지·파출소) 등 단계별 목표 설정·관리, 현장대응시간 단축 / 자동도착처리율 향상도 병행



- 112신고 대응체계 정교화 등 업무기반 조성 및 현장대응능력 제고

※ 110(국민권익위)와 연계 민원 상담건 적극 이관, 허위신고·비긴급 신고 유입 최소화

- (생활범죄수사팀 운영 내실화) 경미절도 등 생활범죄 적극 해결 및 피해품 회수 강화를 통한 국민만족도 제고

- 또한, 조폭·주폭 등 생활주변폭력배 집중 단속 및 재범 차단 등 사후관리 강화, 서민 생활 안정 주력

- △악성 사이버범죄에 대한 총력 단속 △방심위 등 유관기관과 정보 공유를 통한 피해예방 등 공감받는 생활경제 침해사범 근절 활동 도모

※ 사이버사건 중 경미범죄는 즉결심판·각하 등 제도를 활용, 전과자 양산 방지

(2)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 공동체치안의 특성 上 지역사회 구성원의 치안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고, 내부역량 제고를 위한 인력·예산 등이 필요
- 외부 환경(△교통 체증 △장비·인력 부족) 및 내부 역량(△현장경찰관 역량 부족 △112시스템 결함) 등은 112 신속대응에 걸림돌로 작용
-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소액절도 등 생활형 범죄가 늘어나고, 강남역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여성범죄에 대한 불안 증가
- 모바일 시대를 맞아 국민 생활에서 사이버 영역 비중이 갈수록 확대됨에 따라, 사이버범죄도 지속 증가 추세

(3) 참고자료

- 112 신고·접수 매뉴얼 및 문제집(경찰청, 2016)
-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cyberbureau.police.go.kr)

(1) 주요 내용 및 추진계획

- (국내 체류외국인 대상 범죄예방) 국내 체류외국인 급증, 해외 국민·기업 진출 확대 등 치안환경이 급변, 전략적 대응 필요
 - 결혼이주여성, 이민2세대 등 다문화 구성원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맞춤형 범죄예방대책 마련
 - 민간 통역요원 인력풀(36개어권 2,877명) 구축 및 외국인 커뮤니티(192개)와 네트워크 결성, 외국인자율방범대 조직 등 추진
 - 여가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접근성이 높은 기관을 '외국인도움센터(333개소)'로 지정, 범죄피해 상담 창구로 활용
- (재외국민·기업 보호 강화) 사건사고·체류교민 등 공관별 치안 수요를 고려, 경찰주재관 등 치안전문가 해외파견 확대 및 선발·관리 체계화 등 전문성 제고
 - UN·인터폴 등 국제기구 참여 활성화 등을 통해 국가 간 치안 협력 관계를 지속 확대·심화, 긴밀한 치안 협력체계 구축
 - 외국경찰과의 MOU 체결 및 재외국민 피해가 많은 국가를 중심으로 지휘부 방문·협업체 구성 등 적극적 치안 외교 전개
 - ※ 주요 치안 협력국 경찰총수 방한 및 외국 경찰관 초청행사 등 병행,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국제협력 강화
- (사이버범죄 대응) 국민 생활에서 사이버 영역의 비중 확대, 사이버범죄의 양상도 지속 발전함에 따라, 경찰의 대응역량 강화 및 시민참여·예방·국제협력 등 협력체계 구축 긴요
 - ※ 사이버범죄 발생건수 : 144,679건('15년) → 153,075건('16년)
 - ※ '16년 사이버테러형 범죄(해킹, 디도스 등) 2,770건 발생

(2)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 우리나라는 2021년 체류외국인 300만명(전체인구의 5.8%*)을 넘어서고, 이와 함께 2012년 이후 외국인범죄도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

* OECD 국가의 전체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은 프랑스(6%), 캐나다(6%), 영국(8%) 등('16년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 체류외국인 국적별 비중 : 중국 50.6%, 미국 7.8%, 베트남 7.2%, 태국 4.6%, 필리핀 2.7%, 우즈베키스탄 2.6% 등

< 체류외국인 및 외국인 범죄자 증감 추이 (단위:명)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9
체류외국인	1,261,415	1,395,077	1,445,103	1,576,034	1,797,618	1,899,519	2,034,878
외국인범죄	22,543	26,915	24,379	26,663	30,684	38,355	32,893

출처: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2016), 경찰청(2016)

- 특히, 다문화 2세대를 범죄 · 테러 등 사회위협요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FGI 실태조사 및 관리모델 개발 필요
- 다양화 · 전문화되는 국제범죄는 국가 간 경계도 허물어지고 있어 개별국가만으로 대응 곤란하고 긴밀한 국제공조 중요하나, 외교부 · 행정안전부 ·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의 공감대 부족
 - ※ 재외국민 사건 · 사고 : 5,706건('11년) → 14,075건('15년)
 - ※ 필리핀 살인 등 강력범죄 한인 피해자 : 39명('11년) → 46명('15년)

(3) 참고자료

- 외교부(www.mofa.go.kr)
- 행정자치부(www.moi.go.kr)
- 인터넷진흥원(www.kisa.or.kr)
- 방송통신위원회(www.kcc.go.kr)

(1) 주요 내용 및 추진계획

- 북 도발 등 국가 위기 상황 대비 철저한 안보태세 확립, 안정적 국정 운영 뒷받침
 - 경찰작전역량 향상을 반복적 실제훈련(FTX) 실시 및 軍 등 유관 기관과의 원활한 합동작전 수행 체계 구축
 - 매년 「전국 경찰작전부대 전술역량 평가 대회」 개최, 교육·훈련에 대한 동기를 부여함과 동시에 작전수행능력의 전문성 제고
- 현장 중심 테러예방활동 및 테러대응역량 강화로 테러 위협 불식
 - △테러취약시설 지도·점검 △유관기관 합동 대테러훈련(FTX) △선제적·가시적 특공대 배치 등 현장중심 적극적 예방활동 실시
 - △관계기관 협업체계 고도화 △특공대 등 전담조직 확대 및 전문 인력 확보 △경찰특공대 국제교류 및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성 제고
 - ※ 관계기관 협업체계 고도화는 유형별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취약점을 발견·보완하는 등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중심으로 추진
- 각종 안보위해요소 차단 및 보안활동 기반 조성 등 안보태세 확립
 - 국가안보 수호 및 통일 대한민국의 기반 확립을 위해 간첩 등 주요 안보위해사범·보안관련 사범에 대한 보안수사 강화
 - 사이버상 안보위해요소 확산 방지 및 탈북민 신변보호 활동 강화
 - 정보 공유체계 및 대외 협력 강화를 통한 양질의 외사치안 정보 수집, 사회갈등 및 치안불안 요소 사전 차단
- 재해·재난 등 위기상황 대응역량 강화 및 출동 경찰관 안전 확보를 위한 맞춤형 장비 보급

- 화학물질 안전원·적십자·소방교육기관 등 전문 재난대응 기관 위탁·방문 교육 실시
- 화학·방사능 사고 보호장비 등 주요보호장비(총 8종, 15억 8천만원) 일괄 구매·보급, 현장경찰관 안전 확보 및 대응역량 강화 노력

(2)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 대북 상황 관련, 이해관계국가 및 北의 태도변화에 대한 예측이 힘들고, 이에 따른 北의 국지도발 및 후방테러 가능성 상존
- ISIL 등 무장테러조직의 국제적 테러 증가로 국민 불안감 가중, 테러취약시설과 국내·외 주요 요인에 대한 대테러 활동 강화 시급

- ▶ 매회 경호행사 시 다각적 환경 분석, 위해요소 사전 차단을 통해 국내·외 경호대상자에 대한 완벽한 신변안전 확보
- ▶ 탈북민·재한 외교사절 등 신변보호활동을 강화하고 국민의 공감과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안보·테러예방 홍보활동 전개

(3) 참고자료

-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www.jcs.mil.kr)
- 경찰특공대(www.smpa.go.kr/knp868)
- 국민안전처(www.mpss.go.kr)
-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748호)

기 본 방 향

- ◇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성숙한 집회시위문화를 정착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수사를 통한 국민의 신뢰 제고
 - 집회의 최대한 보장 및 여타 기본권과 균형을 통한 국민 편익 증진
 - 지능범죄·국외도피사범 검거활동으로 정의로운 사회 구현
- ◇ 현장의 수사역량 강화 및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 수사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주변의 불법·무질서를 척결
 - 수사전문화 등을 통해 국민·현장 중심의 수사서비스 제공
 - 교통위반 등 생활주변의 무질서를 척결하여 준법문화 정착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

성과목표 / 성과지표(산식)	실적 및 목표치					
	'16	'17	'18	'19	'20	'21
II-1.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집회를 보장하여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를 확산한다. ▶ 자율성 제고에 따른 준법 확산율(자율적 집회시위 건수 / 불법폭력시위 건수) ※ 자율적 집회시위 건수 : 전체 집회시위 건수 중 경력이 배치되지 않은 집회시위 ※ 불법폭력시위 : 불법폭력시위 심의위 심의 결과 반영	9.54	10.01	10.5	11	11.5	12
II-2. 구조적 부패·부조리를 엄단하여 깨끗한 사회를 구현한다. ▶ 부정·부조리 사범<지능·외사> 검거인원(부정부패·외사사범 검거인원) ※ 부정부패 : 국회의원·자치단체장·고위공직자 등의 공직비리	13,271	15,637	17,058	18,480	19,901	21,323
II-3. 수사 환경을 개선하여 일선 현장의 수사 역량을 강화한다. ▶ 치안고객만족도 수사·형사 분야 조사결과(수사·형사분야 접촉고객 설문조사) ※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의뢰, 경찰서당 수사·형사 분야별 40명 설문조사	68.2	68.8	69.4	70.0	70.6	71.2
II-4. 생활 주변의 불법·무질서 척결로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한다. ▶ 교통사고 체감안전도(교통안전 부문 대국민 설문조사) ※ 경찰청 고객만족모니터센터에서 조사(최근 3년 평균 65.5점)	66.7	67.7	68.7	69.7	70.7	71.7
▶ 생활질서위반사범 단속지수(생활질서 소속 직원 1인당 검거인원 산출) ※ 성매매, 사행성게임장 등 불법풍속업소 1인당 검거 인원 반영	24.7	26.0	27.0	28.0	29.0	30.0

(1) 주요 내용 및 추진계획

-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집회를 보장하고, 여타 기본권과의 조화를 통해 성숙한 집회시위문화 정착과 국민 편익 증진
 - 미신고·금지통고 집회도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명백한 위협이 없다면 개최를 최대한 보장하고, 인권과 안전에 유의한 집회 관리
- 대규모 집회시위 예고시 현장 불법억제 보다는 불법 가능성 분석·법률 검토에 따른 집회장소 등 사전 협의로 준법 유인
 - 행정법적 사고에 기반한 교통소통·안전확보 위주의 집회시위 관리로 자율성 보장, 스스로 법과 원칙 안에서 의사표현하도록 유도
 - ※ 묵과할 수 없는 법익 침해시 사법조치 등을 통해 책임 있는 집회시위문화 구축
- 집단갈등·비정형적 시위 등 적극 대응, 생활 속 법질서 확립
 - 집단갈등 초기부터 불법·과격행위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고, 당사자간 대화 중재 등 조기해소를 위한 경찰의 노력도 제고
 - ※ 신속대응팀 및 분야별 교육,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한 역량 강화
 - 차량시위 등 비정형적 시위 예고시, 준법촉진 등 사전 정보활동으로 불법 방지 및 맞춤형 대응방안 마련, 국민 불편 최소화
 - ※ 비정형적 시위 유형에 대한 법률을 면밀히 검토, 예고된 불법행위 및 우려 요소에 대한 맞춤형 대응방안 수립·시행
 - 노사분규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등 협업시스템 가동 및 분류 당사자간 중대 역할 등을 통해 산업현장 법질서 확립 뒷받침
- 사전 정보활동을 통한 '준법촉진' 및 '안보위해' 정보역량 강화

- '향후 5년간 대규모 시위(1천명 이상)의 준법집회 촉진율 지속 증가'를 목표로 '사전 정보활동 중장기 계획' 지속 추진

※ △'불법시위 대응 정보분석회의' 정례화 △경비·수사·법무 등 관련 기능이 참여하는 T/F 회의 및 판례 분석을 통해 법률적 정당성 확보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 각종 이슈에 의한 집회 등 급증에 따라 치안부담 증대 우려
 - 새정부 출범 이후 △탈원전 △사드 배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주요 정책 추진에 따른 정치·사회적 이슈뿐만 아니라,
 - 대북 관계의 계속되는 긴장감 및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 제재에 따른 내수경기 위축 등 경제적 이슈 또한 산적
- 각종 이슈를 겨냥한 노동계·농어민·保革 등의 대규모 집회시위 뿐만 아니라 이익단체간 집단갈등 또한 급증할 전망
 - 또한, 법원이 그간 집회시위를 금지해왔던 청와대·헌법재판소 인근에서의 촛불집회·행진을 허용하였으며,
 - 사회적 이목 집중을 위한 트랙터·화물차 등을 이용한 비정형적 시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집회시위 관리에 부담 예상

(4) 참고자료

- '17년 경찰청 주요업무 계획
- '16년도 집회시위 관리지침
- '16년 경찰청 통계연보

(1) 주요 내용 및 추진계획

- (지능범죄수사) 부정부패 사범 中 대 부패비리 중심*으로 연중 단속 체제 유지하면서, 테마별·시기별 특별단속 병행 실시

* 3대 부패비리 : 토착·권력형 비리, 고질적 민생 부조리, 생활밀착형 안전비리

- 민생경제 침해사범 등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기획수사 9대 중점과제** 선정, 수사역량 집중을 통한 단속 활동 전개

** △전화금융사기 △유사수신 등 투자사기 △불법대부업 △보험사기 △공적자금 부정수급 △3대 대포물건 △부정부패 △문화재 비리 △지식재산권 비리

- 기획수사와 병행, 유관기관과 협력체제 구축 및 제도 개선 추진, 피해예방을 위한 전략적 홍보활동 실시

※ 지능 범죄 수사관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수사분야 매뉴얼 개정 및 제작 △수사 기법 공유를 위한 워크숍 등 프로그램도 지속 추진

- (외사범죄) 주요 외국인 밀집지역을 '외사 치안안전구역'으로 지정, 단속활동 등을 통한 외국인 밀집지역 체류질서 등 기초치안 확립

※ △'외사치안협의회'(경찰·지자체·지역주민) 구성 △국수대·지역경찰 합동순찰·검문검색 △법무부 주관 '불법체류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적극 참여 등

- 외국인 강폭력·불법 입출국 등 국제범죄 근절을 위한 적시성 있는 집중단속 전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질서 확립 선도

- 국가핵심기술 등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적극적 기획수사 및 부처간 협업을 통한 기술유출 피해신고 활성화

- 코리안데스크 등 국제공조수사 역량 강화를 통해 국외도피사범 송환 활성화

(2)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 ‘청탁금지법’ 시행(‘16.9.28.) 및 고위층 인사들의 잇따른 권력형 비리 발생에 따른 부정부패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 확산
- 체류외국인 급증으로 외국인범죄 증가 추세에 따른 국민적 우려 해소를 위해 경찰활동 요구 증대
- 국가 산업기술 유출방지와 중소기업 등 기술보호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내부비리 신고와 함께 전문성 강화 절실

(3) 참고자료

-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1) 주요 내용 및 추진계획

- (수사 인프라 확충) 경찰수사 전문성 향상 및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사부서 환경·인력 등 인프라 확충
 - △빅데이터 기반 범죄분석 프로그램 및 플랫폼 연구 △수사자료 분석 체계 고도화 및 수사기법 개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고도화
 - 대민 점점 수사부서인 경제팀·생범팀, 신속한 수사지원을 위한 폴리그래프 검사관 등 현장수사 인력 증원하고, 인권보호 및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수사환경 개선
 - 수사팀장 자격제를 골자로 한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개정, 경력자 위주의 인사운영을 위한 「과학수사 전문관」 제도 확대
 - 「공인탐정법」 제정 추진, 민간조사 활동을 제도화·양성화 하여 국가가 관리, 국민의 원활한 피해회복 및 청년 일자리 창출
- (수사구조개혁 추진) 세계 표준에 부합하는 국가수사시스템 도입 및 경·검간 합리적 역할 정립을 위한 실무관행 개선 등 수사구조 개혁 지속 추진
 - 수사구조개혁 논리기반 확충, 대외협업 강화, 수사주체성 확보
 - 수사제도 개선 및 역량강화,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신뢰 확보
 - ‘공인탐정법’ 제정 추진
- (과학수사 역량 강화) 현장 치안력 강화를 위해 과학적 범죄 대응을 위한 현장기법·증거·정보 등 분석지원

- 다양한 범죄데이터를 융복합하여 국민과 경찰에게 안전·범죄 대응정보를 제공하는 R&D 추진('17~'21, 121억 투입)
 - '광역 과학수사체제' 개선·안정화 실시, 2인1조 임장 체제 확립
 - 국과수와 정기적 업무협의회 개최, '과학수사 자문위원회' 운영, '한국경찰과학수사학회' 운영 지원 및 학술대회 공동 개최
 - '과학수사 전문관' 제도 확대, '2017 국제 CSI 컨퍼런스' 개최
 - 중요사건 지문, 족윤적 등에 대한 긴급·집중 감정 지원
 - GeoPros(지리적프로파일링시스템)* 기능 고도화, 지원 확대
 - * 범죄 현황을 지리적으로 분석, 예방 및 검거에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범죄 밀집지역(HotSpot) 기능에 지역정보·범죄 데이터 연계 등 개선
 - 신속한 수사지원을 위한 폴리그래프 검사관 업무 역량강화
 - 최신 몽타주 시스템, 3D 얼굴인식 시스템, 동영상 축약 프로그램 보급 등 현장 인프라 강화
- (디지털포렌식 전문성 강화) 증거분석 품질 제고, 증거능력(무결성 유지, 적법절차 준수 등) 유지·관리 및 연구·개발
- 디지털증거 긴급분석제도 도입, 증거분석보고서 양식 표준화, 전문과정 운영 및 디지털증거분석 도구활용 자격증 취득
 - 디지털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 및 전자정보 확인서 표준안 개선, 현장용 디지털증거분석 프로그램 고도화
 - 데이터 완전 삭제 프로그램 신규 개발, 신규 기술 및 기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기술 연구(카운터 안티포렌식, 드론 포렌식 등)

(2)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 법지식·수사절차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경찰수사에 대한 기대 수준 향상으로 국민중심 수사행정에 대한 요구 지속 증가
 - 경찰수사의 전문성·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사제도 확립 등 대국민 신뢰 확보 노력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점증
 - 법조비리 의혹 등 現사법구조에 의한 폐해가 드러남에 따라, 검찰권의 분산·조정에 대한 요구가 시대적 공감을 받는 상황
 - 제20대 국회에서 검찰개혁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으며, 정치권·학계 중심으로 수사구조개혁이 주요 의제로 논의
- * 공수처 설치법안(野2당 공동, '16. 8月), 검사 셀프수사 금지법안(표창원 의원, '16. 9月), '수사·기소 분리' 형사소송법 개정안(표창원 의원, '17. 1月)
- 형사사법체계에 민주적 요소**가 반영됨에 따라 객관적 증거와 공소유지의 핵심을 담당하는 증거보전의 중요성은 점차 증대
 - ** 증거재판주의, 법률시장 개방 등 자백·진술 위주에서 객관적 증거 위주로 전환
 - 다변화되는 범죄 수법, 미디어·SNS 등을 통한 수사기법 노출, 증거인멸 등으로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은 어려워지는 실정
 - 사법적 정의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발전된 과학기술을 적용한 과학수사 및 디지털 증거분석 역량 강화가 필수
-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도래, 데이터 분석 기술의 고도화로 다양한 의사결정의 지원이 가능
 - 특히,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범죄 관련 데이터는 과학적 분석을 통해 치안 활동의 효과적인 지원을 건인할 수 있는 자산
 - 세계 일류 수준의 치안역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범죄 관련 정보·증거·기법에 대한 분석 역량 발전이 필수

(3) 참고자료

- 수사구조개혁 홈페이지(www.susa.go.kr)
-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www.cyberbureau.police.go.kr)
- 과학수사 홈페이지(www.kcsi.go.kr)

(1) 주요 내용 및 추진계획

- 운전자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개선 추진
 - (신규교육)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및 등록학원의 불법행위 지속 단속 및 강사자격시험 개선, 체계적인 교육환경 조성
 - (사후관리) 음주, 난폭·보복운전 등 위험운전자 대상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정비 및 강화, 교통안전교육의 내실화
 - ※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연계를 통한 체험형 교통안전교육 활성화
- 운전면허정보를 활용하여 국민편의 도모 및 범질서 확립
 -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현행 천원), 대사관에서 영문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
 - 금융기관에서 운전면허증 진위여부 조회 시 확인된 지명수배자의 정보를 관할 지·파출소에 즉시 전파, 검거함으로써 범질서 확립
- 맞춤형 안전대책 마련으로 교통사고 사상자 3천명대 감소 추진
 -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 및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를 위한 도교법 개정 등 보행자의 법적 안전성 강화
 - ※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 악성불법주차 가중처벌, 보행자 사고 처벌 강화 등
 - 속도관리 중심의 단속 전개* 및 이면도로 보행자 시야를 가리는 악성 불법주차 근절 등 보행안전 위협행위 근절
 - * 보행자보호위반·신호위반 캠퍼더 단속 및 이동식 과속단속 강화
- ‘안전속도 5030’ 도입을 통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보행자 사고감소를 위한 ‘안전속도 5030*’의 성공적 정착 위해
△ 세미나 등 정책홍보 △ 시범운영 확대 △ 연구용역 등 추진

- * 도시부 제한속도를 50km/h로 하고, 특별보호 필요 지역은 30km/h로 지정
- 특히, 특별히 보행자 보호가 필요한 지역 확대를 위해 생활도로 주변의 차량속도를 30km/h로 제한하는 30구역 제도를 법제화
- 학교주변 유해업소 차단 및 청소년 채팅앱 성매매 집중단속
 - 유관부처(교육지원청·지자체) 합동, 매학기(3월·9월) 교육환경 보호 구역 내 유해업소(키스방, 오피방 등) 지도단속 실시
 - 채팅앱 회원 가입 시 인증절차가 전무하고 채팅방의 익명성으로 인하여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악용되는 실정을 감안, 채팅앱 이용 성매매 집중단속기간 운영, 청소년 유해환경 적극 차단
 - ※ (경찰청) 채팅앱 악용한 조직적 성매매 단속, 성매매 대상 청소년 여가부 통보
 - ※ (여가부) 성매매 악용 채팅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채팅앱 규제방안 등 제도개선
 - 신변종 업소(카지노 술집, 승률조작 인형뽑기방 등)에 대한 선제적 법률검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으로 건전한 풍속질서 확립

(2)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속 감소 추세에 있으나, OECD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전체 34개국 중 32위)
- 현행 지정차로제가 지나치게 복잡하여 운전자 준수가 어렵고 좌·우회전이 빈번한 도로에서는 준수 자체가 곤란
- 채팅앱 회원 가입 시 인증절차가 전무하고 채팅방의 익명성으로 인하여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악용될 우려

(3) 참고자료

- 2016년판 OECD 회원국 교통사고 비교(도로교통공단)
- 경찰청(www.police.go.kr) 및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rtsa.or.kr)

기 본 방 향

- ◇ 인권수호 경찰상 확립을 통해 경찰행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치안을 통해 현장대응력을 강화
 -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소통을 강화하는 치안정책 추진
 - 과학치안 R&D 확대 및 ICT기술 등을 활용한 현장대응력 제고
- ◇ 현장 중심의 정책을 개발·지원하여 조직 운영의 합리성·효율성을 높이고, 내부 구성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제고
 - 치안역량 강화를 위한 성과평가제도 운영·적시성 있는 정보 제공
 - 복지기반을 확충하고 합리적인 인사시스템·교육제도 운영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

성과목표 / 성과지표(산식)	실적 및 목표치					
	'16	'17	'18	'19	'20	'21
III-1. 인권수호 경찰상 확립으로 대국민 신뢰를 증진한다. ▶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권익위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 최근 3년 평균 순위는 12.7위로 역대 최고 순위인 11위 이상으로 목표치 설정	14위 (18)	11위 (18)	10위 (18)	9위 (18)	8위 (18)	7위 (18)
▶ 치안고객 만족도(민원·112신고·교통사고·수사 분야 접촉고객 만족도) ※ 외부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 접촉고객 만족도 조사결과 반영	77.3	77.4	77.6	77.8	78.0	78.2
III-2.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으로 활력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한다. ▶ 직무만족도(내부 구성원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 경찰청 전체 구성원에 대한 내부 전자우편 설문조사	77.9	78.7	79.1	79.5	79.9	80.3
III-3.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치안을 통해 현장대응력 강화한다. ▶ 스마트 국민제보 이용 일평균 처리 건수('17년 전체처리건수 / '17년 총 일수) ※ 스마트 국민제보 : 스마트폰·블랙박스 등을 활용하여 사건정보 촬영, 제보 건수	1,393	1,671	1,800	1,900	2,000	2,100
▶ 첨단장비·시스템 만족도(장비·시스템 분야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 경찰청 고객만족모니터센터 조사(최근 2년 평균 84.15)	85.5	88.47	89	89.5	90	90.5
III-4. 현장 중심의 정책을 개발·지원하여 치안역량을 강화한다. ▶ 성과·인사·교육 부문 직무만족도(내부 구성원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 직무만족도 조사결과 중 '인사·성과관리' 및 '교육' 부문 평가결과 평균점수 반영	81.1	81.2	81.4	81.6	81.8	82

(1) 주요 내용 및 추진계획

○ 인권수호·청렴경찰 구현을 위해 강도 높은 개혁방안 추진

- 인권위원회 권고사안 원점 재검토 및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등 인권 중심의 치안행정 시스템 마련
- 현장참여 및 구성원의 자발적인 의식 전환 유도, 청렴문화 확산
- 직무교육 전 과정에 「청렴 인지력 제고 및 의무위반 예방교육」 배정, 경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청렴의식을 내재화

※ 차장 주재 「청렴도 향상 TF」 및 감찰담당관 주재 「실무위원회」(계장급) 운영, 쏙 기능 합동 총력 대응체계 구축

○ 내부 공직기강 확립 및 부패비리 근절 대책 지속 추진

- 각종 비위 근절을 위한 예방감찰활동 및 반부패·청렴정책 강화 및 제도개선·사전비위 예방 중심의 선제적 감사활동 전개
- 금품수수 등 고비난성·상습 비위 척결에 감찰역량 집중
- 성범죄는 무관용 원칙 지속 견지, 특히 상급자의 권한 또는 경찰관 직무를 악용한 성비위*에 대해서는 최고수준으로 문책

* △청소년 △고소인·피의자 △범죄피해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여성 등 대상

- 음주운전 등 지속·고질적인 비위에 대해서도 일벌백계의 기조로 '중징계', '他 관서 전보' 등 엄중 문책하여 경각심을 제고

(2)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 새정부 출범 이후 경찰에 인권친화적 경찰상 확립 등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
- 언론에 여과 없이 노출되는 경찰조직의 특성상 실질적 청렴도 향상 여부와 관계없이 고비난성 비위 보도는 평가결과 왜곡 현상 발생
 - 정확한 언론 대응으로 비난 보도 확대 · 재생산 방지, 오보나 악의적 보도에 대해서는 정정 요구, 손해배상 청구 등 적극 대응 요구
- ※ SNS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국민과의 직접 소통 확대, 온라인 이슈 지속 모니터링 및 관련 기능 협조, 신속 · 정확한 대응이 요구
- 조직 내부 기강확립을 위해 강도 높은 감찰 활동은 갈등 발생 및 일선 경찰관의 사기 · 근무의욕 저하, 무사안일 주의 확산 우려
 - 현장에서는 눈높이에 맞는 징계 양정 및 적극행정 실천자, 모범 · 수범 경찰관 등 적극 발굴 · 포상으로 현장 공감대 조성도 필요

(3) 참고자료

- 안전행정부(www.mospa.go.kr)
-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 감사원(www.bai.go.kr)

(1) 주요 내용 및 추진계획

- ‘보수·수당 현실화, 명예로운 보훈, 퇴직경찰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등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맞추어 내부 복지기반 확충
 - △ 근무환경을 반영한 보수체계 구축 △ 고귀한 희생에 대한 지원 강화 △ 건강검진 자료 연구·활용 등 다양한 복지시스템 마련
- 경찰의 당당한 법집행을 위한 법률·소송지원 확대 및 현장 수요에 맞는 법령정비·규제개혁을 통해 경찰·국민 권익 보호
 - 신속한 법률 제·개정(하위 법령·규칙 포함)을 추진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으로 국민의 부담·불편을 해소
- 치안인프라 예산 확대, 경영마인드에 입각한 재정운영을 통한 합리적 재정지원으로 범죄대응력 강화 및 내부만족도 제고
 - 신도시 등 치안수요 급증지역의 안정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관서 신축 및 노후시설 근무환경 개선 등 치안인프라 확충
 - 치안여건 변화를 반영한 계속·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내·외부 의견수렴을 통한 전략적 예산확보·집행 추진
- 업무 몰입도 제고를 위한 근무 여건·환경 개선 및 신속한 행정 서비스 제공 등 선제적 행정 지원을 통한 치안 역량 극대화
 - 일·가정 양립 및 업무 능률 증진을 위한 연가·유연근무 활성화 하고 수요부서 의견을 반영한 사무공간 조정 및 추가 확보
 - 충격사건(죽음 목격 등)을 경험한 경찰관의 심리 안정을 위해 발생 후부터 한 달간 전문 상담사를 통한 ‘긴급심리지원’ 실시

- 주차편의 향상 및 청사보안을 강화하고 주기적 안전·소방점검, 시설 정비·보수와 청사방역·청소를 통해 쾌적한 환경 제공

(2)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 11만 명이 넘는 조직 특성상 막대한 재정 소요 등 이유로 예산 증액이 쉽지 않아 관계부처 및 국회 설득에 어려움이 있음
- 경찰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기금 활용 확대 등 현장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필요
- 현장의 수요에 맞는 법령정비 · 규제개혁을 위해 조직 내부 구성원은 물론 국회 등 관련기관의 공감대 형성 필요
- 경찰 특성을 반영한 업무수행 기반 확충에 대하여 소요예산 및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관계부처의 반대 예상

(3) 참고자료

-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 기획재정부(www.mosf.go.kr)

(1) 주요 내용 및 추진계획

- 급변하는 치안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투입 위주 방식에서 ICT(정보통신기술) 등 과학적 방식으로 범죄대응 패러다임 전환
- 한정된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능동적·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Smart Policing’이 핵심

스마트 치안활동(Smart Policing)

- ▶ (협의) 법집행 영역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경찰활동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고 적극적으로 과학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개념
- ▶ (광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찰이 갖는 기존 가용자원(인력, 자원, 장비, 예산 등)을 집중시켜 경찰 활동 전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전략

- 첨단 과학수사 기법·장비 연구개발로 수사역량을 제고하고, 범죄 대응역량 향상을 위해 치안 R&D 활성화

<관련 주요 R&D>

- ▶ 빅데이터 기반 범죄분석 알고리즘 및 분석모형 개발 : 112시스템 등 범죄 관련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범죄발생 예측 및 예방활동 지원
- ▶ 스마트 신호운영 시스템 개발 : CCTV 등 교통소통정보를 수집하여 교통상황 예측자료를 실시간으로 분석, 맞춤형 신호 제어를 통해 원활한 교통소통 제공
- ▶ 경찰장비 개발 : 흉기피습·총기사고 대응 방패, 방탄·방검 성능을 갖춘 최첨단 방탄복, 한국형 스마트 전자충격기, 적정 물리력을 갖춘 스마트 대체총기 등

※ '17년 경찰청 '치안R&D' 주요 사업 : △첨단과학수사 기술 개발(26.8억원)
△현장대응역량 강화 기술·장비 개발(23.2억원) 등 11개 과제 97.15억원

-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연구하고 치안현장에 특화된 장비를 개발하여 현장 경찰관을 지원함으로써, 현장치안역량을 강화

※ 현장 맞춤형 연구개발(폴리스랩) 등 한국형 스마트 폴리스 모델 구축

- 과학치안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인프라 구축 등 전문성 강화
 - ‘산업’과 ‘치안’의 연계 기반 구축을 위해 「(가칭)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과학치안분야 전공 경력자 충원

(2)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 과학치안은 현장 경찰관들이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범집행할 수 있는 중요한 환경적 요소로서 현장 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 기대
 - 범죄예방·수사에 필요한 기법·기술의 고도화나 첨단장비의 개발·보급은 현장 경찰관들의 업무역량과 직결되고 직무만족도에도 영향
 - ※ ‘목숨 걸고 출동한다’ 작년 경찰관 400여명 피습’ 題下 보도(연합, ‘16.10.19)
 - ※ “범죄 날로 지능화… 국가차원 치안R&D 추진해야” 題下 보도(연합, ‘16.6.20)
 - ※ 매년 「경찰관 직무만족도」 조사 시 피복, 장구, 차량, 업무시스템 등 근무환경 평가
- 사법환경에 민주적 요소 반영(법률시장 개방, 공판중심주의 등)으로, 과학수사에 의한 증거수집·분석업무에 대한 중요성과 부담 증가
 -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범죄의 지능화 및 신종범죄 출현 등 미래 치안환경은 급변하고 다변화될 것으로 예상, 과학치안 중요성 부각
- 과학수사기법·기술·장비의 체계적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경찰업무 특성이 반영된 전문연구기관이 운영되어야 하나 현재까지 부재
 - 미국·영국·중국 등 선진국에서는 경찰업무 특수성이 반영된 기술이나 장비의 연구·개발을 위해 전문기관 운영 등 적극적 지원

- ▶미국 : 국립사법연구원(NIJ, 연구인력 75명, 예산 3,400억원)에서 치안 R&D 추진
- ▶영국 : 내무부 과학기술국(HOSDB, 연구인력 200여명)에서 최신 지문감식 기법 등 연구개발
- ▶중국 :公安부 제1연구소(연구인력 1,100여명), 제3연구소(연구인력 860여명)에서 치안 R&D 추진
- ▶일본 : 경시청 산하 과학경찰연구소(NRIPA)에서 범죄수사기법, 교통사고 등 연구
- ▶캐나다 : 경찰연구소(CPRC)에서 경찰장비개선 등 치안분야 과학기술·장비 연구

(3) 참고자료

- 스마트 국민제보(onetouch.police.go.kr)
- 세계의 경찰 및 법집행기관용 장비시장(www.giilorea.co.kr)
- 한국과학기술연구원(www.kist.re.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www.keit.re.kr)
- 2018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주요 내용 및 추진계획

- 치안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성과평가제도 운영
 - 성과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는 한편, 목표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일선현장의 치안역량 제고
 - 평가체계를 정부업무평가 → 자체평가 → 치안종합성과평가를 연계, 현장 성과의 합이 경찰 전체의 성과로 귀결되도록 설계
 - 현장컨설팅을 통한 관서별 평가결과 격차 해소하고 문제성 지표를 개선하는 등 평가결과 고착화 해소 및 성과지표의 수용성 제고
 - 일선의견을 반영하여 개선된 성과평가제도가 치안현장에 안착되어 조직 활력과 치안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홍보 강화
- 현장활력 증진을 위한 인사·교육제도 운영
 - △특별승급 확대 △특별승진 제도 개선 등 성과 우수자 포상을 확대하고 선발 심사위원 구성을 다양화 하는 등 공정성 제고
 -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직위제 확대 운영 방안 추진
 -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창출을 위해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확대
- 우수인재 선발 및 직무교육 활성화를 통한 치안전문가 양성
 - 교육기관에 입교하지 않고도 경찰관서에서 직무교육이 가능한 현장순회교육 내실화, 「직무-학습」 간 유기적인 연계성 강화

- 집합교육의 시간적 · 공간적 한계를 보완한 사이버교육을 내실화
- 조직 내 자기주도적 학습문화를 정착시키고 집단지성을 통한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실천적 지식공동체인 현장학습모임 지원·육성
- 경찰 채용시험 투명성 강화를 통한 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 선발
- 양질의 정책정보 생산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이 원하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치안활동 뒷받침

(2)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 성과평가 · 인사업무 특성상 상대평가로 인해 하위등급이 필수적으로 발생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도는 낮은 반면,
 - 경정 이상 성과연봉제 도입 등으로 중간관리자들의 관심이 많아지면서 성과에 대한 부담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
- ※ 일부 구성원은 성과관리를 실적주의와 동일시하여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
- 인사고과평정, 승진, 보직인사 등 개인신상에 관련된 민감한 사안은 조직기강 · 분위기를 좌우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
 - 승진 · 보직쿼터제 등 균형 있고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으로 조직 화합 및 직무전념 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

(3) 참고자료

- 총리실 정부업무평가시스템(www.eipses.go.kr)
- 기획재정부(www.mosf.go.kr)

1. 총괄현황

(단위: 개)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 과 지 표					
		소 계	지표성격				정량지표
			투입	과정	산출	결과	
3	12	18	-	-	7	11	6(33.3%)

2.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성 과 목 표	성 과 지 표	측정 방법 (또는 측정 산식)	'17년 목 표 치	지 표 종 류		비 고
				정 량 화	성 격	
전략목표1 범사회적 협력을 바탕으로 주민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한다.						
(1) 사회적 약자 보호체계의 내실화로 범죄피해를 최소화한다.	성 폭력 국민체감 안전도 조사 <40%>	전문 여론조사기관 설문조사 결과 반영	26.6	정성	결과	
	가정폭력 안전도 조사 <30%>	전문 여론조사기관 설문조사 결과 반영	55.8	정성	결과	
	학교폭력 안전도 조사 <30%>	전문 여론조사기관 설문조사 결과 반영	24.0	정성	결과	
(2) 공동체치안 활성화로 주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한다.	5대 범죄 검거율	5대범죄 발생건수 / 검거건수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78.9	정량	산출	
(3) 국제·사이버 범죄에 공동으로 대처하여 변화하는 치안환경에 적극 대응한다.	국제공제 기반조성 지수	경찰주재관, UN 및 인터폴협력관 등 해외 파견 경찰관 인원 수	135	정량	산출	
(4) 안보·테러 대응역량 강화로 확고한 사회안정을 유지한다.	유관기관 합동 위기대응체계 구축도 <50%>	협력관계 추진 대표 카테고리를 선정하여 등급별 분류, 활동 점수 합산	66.2	정성	결과	
	테러대응역량 지표에 기반한 테러 안전도 <50%>	테러대응역량 지표와 특수시책 가점	90 ↑	정성	결과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 방법 (또는 측정 산식)	'17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전략목표2 공감 받는 법집행으로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한다.						
(1)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집회를 보장하여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를 확산한다.	자율성 제고에 따른 준법 확산율	자율적 집회시위 건수 / 불법폭력시위 건수	10.01	정량	산출	
(2) 구조적 부패·부조리를 엄단하여 깨끗한 사회를 구현한다.	부정·부조리 사범 (지능, 외사) 검거인원	부정부패(공직비리) 검거인원 + 외사사범 검거인원	15,63	정량	산출	
(3) 수사 환경을 개선하여 일선 현장의 수사 역량을 강화한다.	치안고객만족 도 수사·형사 분야 조사결과	치안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수사형사 접촉민원인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방식)	68.8	정성	산출	
(4) 생활 주변의 불법·무질서 척결로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한다.	교통사고 체감안전도 <50%>	경찰청 연구발전과에서 실시하는 교통사고 체감안전도 조사를 통해 점수 산출	67.7	정성	결과	
	생활질서 위반사범 단속지수 <50%>	형사사범정보 시스템(KICS) 통계를 활용하여 1인당 검거인원 산출	26.0	정량	산출	
전략목표3 인권 친화적 경찰을 구현하고 현장의 활력을 한층 제고한다.						
(1) 인권수호 경찰상 확립으로 대국민 신뢰를 증진 한다.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60%>	권익위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를 그대로 사용	11위	정성	결과	
	치안고객 만족도 <40%>	4개 분야(민원, 112신고, 교통사고조사, 형사·수사) 치안고객만족도 종합점수	77.4	정성	결과	
(1)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으로 활력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한다.	직무만족도	직무만족도 조사결과 (상·하반기 온라인 설문조사)	78.7	정성	결과	
(2)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치안을 통해 현장대응력 강화한다.	스마트 국 민제보 이용 일평균 처리 건수<50%>	'17년 전체처리건수 / 일수(1월~10월)	1,671	정량	산출	
	첨단장비 · 시스템 만족도<50%>	만족도 조사 점수 (장비·시스템 분야 점수)	88.47	정성	결과	
(3) 현장 중심의 정책을 개발·지원하여 치안역량을 강화한다.	성과·인사 ·교육 직무만족도	직무만족도 조사결과 중 '인사·성과관리' 및 '교육' 부문 평가결과의 평균점수	81.2	정성	결과	